

여야 거친 대결에 '김명수 인준' 불투명

〈대법원장 후보〉

민주 소속의원 비상대기령
광주 예산정책협도 연기
보수 2野 “코드인사 안돼”
국민의당 “추·우 사과해야”

지난 12~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14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원칙을 거듭 내세우고 있어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에 실패,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명수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상태에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여론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조속히 임명돼 사법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국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15일로 예정했던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연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



“김명수 인준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신문스크랩의 제목 중 ‘인준’에 동그라미를 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가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보수야당은 '코드 인사'라며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서 안 된다"며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

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도 최종 결정권을 손에 쥐고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을 시 인준안 상정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날 비공개의 총회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는 찬반양론이 쏟아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것

으로 전해진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부적절한 언사를 동원해 국민의당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민주당과는 어떤 절차적 논의, 김명수 인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 논의를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적폐인대", "뺑깡"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9월25일 이전에 일정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에 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장현 시장 “SOC 삭감 아니다”

“지난해보다 196억 늘어”...국민의당 “특정 정당 대변” 반발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 호남 SOC 예산 논란과 관련, “예산 삭감이 많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두둔,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다시 연기됐다.

윤 시장은 14일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의 먹거리가 포함돼서 다행이다”면서 “데이터 상으로는 (SOC예산) 삭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가 요청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광주순환고속도로 사업비가 대폭 깎인 것은 사업 절차상 상당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광주의 SOC 예산은 내년엔 837억 원으로 올해 641억 원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윤 시장의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광주시민은 책임감 있는 시장이 필요하지 특정 정당 대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시가 요구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도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의 태도일 수 있느냐”며 비판했

다. 국민의당도 윤 시장의 발언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존 SOC사업 예산 삭감은 물론 경전선 신규 SOC 사업 예산도 철저히 외면됐다”며 “SOC를 제외하더라도 광주시의 신규 사업 가운데 37건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박지원 전 대표는 “총리, 부총리 등과 물밑 접촉을 통해 내년 광주·전남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광주시청 직원들도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윤 시장의 발언은 한가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상황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기키로 했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야 “복지 확대, 균형발전 저해” 여 “아파도 걱정없는 나라 건설”

사회·교육·문화 대정부질문

지역평준 논란이 있는데 특히 호남이 지나치게 차별받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날엔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야 정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SOC예산 축소’ 정책으로 경기둔화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정책변화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오호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국민이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들은 감기 치료받는 치료비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중병 걸렸을 때 나라가 책임져 주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향후 높은 분담률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엄청난 건보 재정 투입에 비해 보장성 확대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 SOC 예산 편성에서

지역평준 논란이 있는데 특히 호남이 지나치게 차별받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날엔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야 정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SOC예산 축소’ 정책으로 경기둔화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정책변화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오호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국민이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들은 감기 치료받는 치료비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중병 걸렸을 때 나라가 책임져 주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향후 높은 분담률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엄청난 건보 재정 투입에 비해 보장성 확대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안여객, 대중교통에 편입해 요금 인하”

박준영 의원 개정안 발의

섬 지역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로 편입시켜 운임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 체계로 편입시켜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선버스·도시철도·철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했지만, 여객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에 개정안에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 및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연안여객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고 매년 1500만명 이상이 섬을 찾지만 비싼 운임은 섬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운임을 할인받지만 친인척, 관광객들은 여전히 거리에 따른 비싼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친박 지우기’ 한국당 내홍 조짐

비박 “본격 통합 나서야”...친박 “뺨셈정치 할 때 아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권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혁신안 발표로 보수대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독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인적정신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 입장차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의원들은 이번 혁신안 발표로 통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만큼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14일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정화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로 우

리가 바른정당에)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 역시 “혁신위가 대의를 위한 결정을 했고, 이제 큰 틀에서 통합을 위한 기초는 마련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굳이 이 시점에 혁신안을 발표해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이번 혁신안은 틀렸다”며 “지금쯤은 뺨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한 달이나 남은 시점에 혁신안을 발표할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